

이정우(전 청와대 정책실장) 1차 구술

1. 구술자: 이정우
2. 면담자: 김형욱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29일
5. 구술장소: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대회의실
6. 구술분량: 05분 32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참여정부 사회복지 관련예산 증액과 의의

구술자 :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예산, 예산배분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그전 정부하고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짜는데 이를테면은 밀실주의라고 할 수 있죠. 각 부처가 예산처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로비를 해서 자기 부처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어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럼 최종결정은 예산처하고 청와대가 딱 쥐고 있죠. 근데 이게 달라져가지고 예산자원배분회의, 정확한 이름은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요¹⁾ 예산을 배분하는 회의를 갖다가 일(1)박이(2)일로 이틀간 장관들을 다 불러서 청와대 수석들도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틀간 토론을 해서 그래서 어떤 예산은 늘이고 어떤 예산은 줄이고 이렇게 방향을 정했죠.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사회정책 쪽의 예산이 늘어나고 경제 쪽의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죠.

그게 확연하게 추세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전에는 항상 경제예산이 우위이고 복지예산이 그 밑에 이렇게 따라가고, 양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고 함에서도 우위는 경제가 차지하고 사회 쪽은 열세에 있었던 말이죠. 발언권도 그렇고. 그게 달라졌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경제부처하고 사회부처가 대등하게 토론해서 정하는 대등한 위치로 올라설 뿐만 아니고 예산이 역전됐으니까요. 완전히 십자형으로 역전돼서 참여정부 끝날 때쯤은 사회정책의 예산이 이십팔(28)이 되고 경제부처 예산이 이십(20)이 되고. 이게 역전이거든요. 참여정부 시작할 때는 이십(20)대 이

1) 국가재원배분회의를 말함. 참여정부는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톱다운(Top-down)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1년 치 예산 총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해당 부처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7권, '정부혁신' 2008, 92쪽 참고.

십팔(28) 거꾸로였거든요.²⁾ 이십(20) 대 이십팔(28)이 이십팔(28)대 이십(20)으로 완전히 십자형으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획기적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이 그것을 독재적으로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고 이틀간, 일(1)박이(2)일간에 장관들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유도해서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 콕콕 바뀌어서 오(5)년간 바뀌서 대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때문에 이거는 여러모로 획기적입니다.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졌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열세에 있던 사회정책이 경제예산보다 우위로 올라섰다는 거. 그런 점에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해냈구요.

지금 생각하면 복지국가가 워낙 유행어가 돼가지고 너나 나나 다 복지국가라고 그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복지국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복지국가라는 말 대신에 주로 논쟁한 것이 ‘성장이냐 분배냐’, 그걸 가지고 특히 보수언론이 시비를 많이 걸어 왔구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한다고 이제 분배도 중요하다, 동반성장,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간다 그래서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갖고 적극 변호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참여정부는 복지국가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웠으면 훨씬 이해가 더 빨랐을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그걸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넣어서 참여정부의 철학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동반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도 노무현 대통령의 작명입니다. 어느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삼(3)층에 큰 국제회의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국정과제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름을 차라리 동반성장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의를 하시더라구요. 들어보니까 ‘아, 그렇네’ 사람들이. 저도 전공을, 그쪽을 전공한다 그러면서도 그런 좋은 작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딱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들으면은 전혀 거부감을 주지 않고 성장과 분배를 둘 다 중시하면서 같이 나아간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 구술자 주요이력

2) 참여정부 기간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예산 비중을 2003년 20.2%(41조7천억 원)에서 2008년 29%대(67조7천억 원)까지 늘린 것을 말함. 같은 기간 경제예산은 비슷한 비중으로 역전됐음.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4권, ‘사회’ 2008, 24쪽 참고.

1950. 대구 출생
1968.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74. 서울대 경제학 석사
1983. 미국 하버드대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3.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1993. - 2003.02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2001.05 - 2003.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2분과위원(경제노동)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
2003.02 - 2003.1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관급)
2003.04 사회통합기획단 단장
2004.01 - 2005.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03.12 - 2005.08 노무현 대통령 정책특보
2005.01 한국경제발전학회 명예회장
2005.07 -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2012년 현재)

대선후보 시절 정책자문단에 참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을 맡았다.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도 ‘진보의 미래’, ‘국가의 역할’ 등을 놓고 집필을 모색하던 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